규제자유특구, '한국판 뉴딜 성공' 주도

'군산 새만금 방문' 김부겸 총리, 특구 위원회 개최

4개 신규 특구 지정…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격려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로 위촉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 균형발전,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규제자유특구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6차 위원회에서는 4개 신규 특구 지정(5차 특구) 및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특구운영 성과평가 결과 및 특구계획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강원(정밀의료 빅데이터),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등 4곳이다.

이번 특구 지정은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과 중앙 정부가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병행해 추진됐으며, 특히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

5차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강원은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정확한 조기진단과 효율적 치료가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돼 의료비 절감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신의료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도 기대된다.

특히, 강원도는 의료산업육성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서 과기부, 산업부 등이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과 연계해 미래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이번 실증으로, 음식물·하수 등 생활폐기물을 그린에너지화해 자원순환경제가 실현되는 한편, 부생수소에 집중된 국내 수소생산을 친환경적인 수소생산 방식으로 다양화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은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정유산업에서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실현 모델을 제시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건설소재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기업이 대규모 설비 구축에 자본을 투자하고, 여기서 생산된 소재를 중소기업이 건설소재로 활용하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변모시켜 친환경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배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중소·소상공인은 물류기업 등과의 협업으로 신속한 상품배송이 가능하게 돼 지역기업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환경 3륜형 전기자전거의 도입은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합하면서, 지역의 부품·소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구축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8월에 실증 종료를 앞둔 1차 규제자유특구 24개 사업의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해 그간의 안전성 입증결과, 사업화 가능성 등에 따라 임시허가 부여, 실증특례 연장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종료 직후, 김 총리는 새만금컨벤션센터 야외주차장에서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운행 실증 중인 LNG 중대형 상용차를 시승했다.

김 총리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가 전국의 14개 특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었고, 배터리팩 등 부품도 국산화하는 등 큰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5월 규제자유특구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됐다"며 "지난 몇 년간 조선업과 자동차업의 어려움으로 고군분투하던 전북 경제에 규제자유특구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격려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와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개발지역 피해주민 지원

민주 이원택 의원 사업법 개정안 발의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농지 황폐화, 방조제 축조로 인한 어가소득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하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 하다"며 "새만금 사업의 결실이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 될 것"

민주 김두관 의원, 대권 도전 공식 선언

균형발전 ·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일 "특권과 차별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후보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는 선언문에서 "전국을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개편,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 2특별도 체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을 펼치며, 지방세 과세권도 지방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후보는 "의회에 상정되는 1%의 중대 쟁점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1% 법안 국민투표제'를 실시하고, 우선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지방분권법, 정치개혁법안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자산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라고 규정한 김 후보는,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시작, 국책모기지를 만들어 모두가 내 집을 갖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김 후보의 대표공약인 국민기본자산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출발점을 맞춰주는 것이 공정이며,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OECD 40개 국가 중 삶의 질 순위가 29위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공동체, 삶의 만족도, 환경, 일과 삶의 조화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한민국을 삶의 질 10위 국가로 대전환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문재인 케어를 계승한 국민주치의제 실시와 간병보험 확대, ▲평균 수명 100세 국가 준비를 위한 100세 인생위원회 설치, ▲동북아 평화를 위한 G20 상설사무국 접경 지역 유치 등을 선언문에 담았다.

김 후보는 "이장부터 장관과 도지사까지, 마을 행정부터 중앙정부 사무까지, 풀뿌리 현장에서 국회 본회의장까지 걸어온 모든 곳에 변화를 만들어 왔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통령이 돼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이해찬 전 대표는 "김두관 후보와 저는 재야 시절부터 40년 넘게 함께 해온 인연"이라고 소개한 뒤, "어느 나라보다 정치가 중요한 나라에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다져온 김두관 동지가 국민의 평가를 받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전혜숙 최고위원, 김주영 최고위원과, 정성호, 신동근, 박정, 서삼석, 위성곤, 김종민, 허영, 민병덕, 정일영, 소병철, 김영배, 김회재, 백혜련, 홍영표, 이원욱, 신정훈, 이용선, 양기대, 양경숙, 신현영, 이해식, 고영인, 이용선, 박영순, 이규민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이 함께 했다.

김 후보는 전날 추첨을 통해 기호9번을 배정받았으며, 출마선언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 이춘희 세종시 시장과 국회 및 청와대 이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3분기까지 도민 70% 이상 접종 목표

전북도, 7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행계획 발표

입영장병, 입대 전 12일

고3 · 고교 교직원 19일

유 · 초 · 중 교직원 28일

55~59세는 26일부터

전북도는 1일 정부의 코로나19 7월 예방접종 실행계획에 따라 3분기까지 도민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전북도 코로나19 7월 예방접종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7월 접종은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를 최우선적으로 접종하며, 대입수험생,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우선접종으로 2학기 전면등교 및 안전한 대입을 지원하고, 50대 접종 시작으로 도민 대상 신속접종을, 지자체 자율접종 개시로 접종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한 방역상황 대응을 추진한다.

7월에 시행되는 접종 대상별 접종 계획은 다음과 같다.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6월 접종대상자 중 사전예약 증가에 따른 초과예약자(60~74세 등)와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제한 대상자 중 6월 미예약자(사회필수인력 등)에 대한 접종이 7월 5일부터 17일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5~6월 60~74세 연령층 사전예약자 중 건강상태 등으로 예약취소·접종연기 처리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7월 12일부터 사전예약을 진행해 7월 26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1만7,475명)과 고등학교 교직원(5,227명)은 7월 19일부터 학교별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고3 이외 대입수험생의 경우 7월 중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8월 중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직원 등과 아동 복지·돌봄시설 종사자 등(2만5,870명)에 대해서는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사전예약을 진행해 7월 28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입영장병

군부대 내 감염예방을 위해 입영장병에 대한 입대 전 7월 12일부터 접종을 실시한다. 7~9월 입영 예정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입영통지서 등을 제시, 대상자 확인·등록 후 예방접종센터에서 예약하여 접종을 실시한다.

▲50대 연령층

55~59세(14만7,980명)부터 시작해 50~54세(15만1,542명) 순으로 순차적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을 실시한다.

우선, 55~59세(1962~1966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7월 19일부터는 50~54세(1967~1971년 출생자)를 포함한 50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55~59세는 7월 26일부터, 50~54세는 8월 9일부터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전라북도 자율접종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 상황을 고려한 접종대상 선정 및 적기 접종을 통해 고위험군 보호, 전파차단 및 방역상황 대응을 위해 7월 말 또는 8월 초부터 전북도 자율접종을 시작한다.

추후, 질병관리청 시.도별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자체계획을 마련해 대상자 선정 후,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난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6월 30일까지 65만명에게 1차 접종을 실시했으며, 7월 접종계획에 따라 3분기까지 도민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7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활용해 대규모 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안전접종 계획과 잔여백신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오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대상자에게 백신별 인식표를 배부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백신별 접종공간? 시설·인력 구분을 권고하며,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담당자 대상 접종센터 현장교육 의무 실시 등 위탁의료기관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오접종 등록정보와 이상반응 감시시스템 연계로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급격한 이상반응 대처 방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위탁의료기관은 매일 마지막으로 개봉하는 바이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백신은 잔여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SNS 잔여백신 예약, 자체 예비명단(60세 이상 우선) 등을 활용해 접종한다. 다만,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잔여백신 발생이 적기 때문에 현행대로 예비대상자 기준에 따라 사전에 작성한 센터별 예비대상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장인 최훈 행정부지사는 "나의 건강과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7월부터 시행되는 접종 계획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예방접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윤석열 '조국 나쁜놈이라 임명 안돼' 文 독대 요청"

열민 김의겸 의원 주장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전부터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진행하고,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 독대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2019년) 8월 27일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색에 들어갔는데 그 전후 상황이 다르다. (윤 전 총장이) 그 전에는 '내가 론스타를 해봐서 사모펀드를 잘 아는데 조국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서 임명하면 안 되고 내가 직접 뵙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면서 독대요청을 두세 차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후 또 조 전 장관 집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청와대 수석들이 격노하며 '대통령 인사권을 흔들려는 거냐,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냐'고 이야기했다"며 "(그러자) 윤 전 총장이 '아니다. 조국만 도려내면 된다. 그게 오히려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제가 취재한 내용"이라며 검찰 내 조 전 장관 사모펀드 관련 내사 보고서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작성 주체에 대해서는 "짐작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제도적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온몸을 던져서 검찰개혁에 저항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